

‘갈짓자’ 광주교육 교단 혼란

시교육청 학생 29명 위한 ‘서울대 논술반’ 운영

“심화반·선행학습은 규제 해놓고...공교육 역행”

진보교육감 취임 이후 우수학생 중심 교육을 반대해온 광주시교육청이 ‘서울대 논술반’을 운영키로 해 교육 정책 기조 변화여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공교육 예산을 투입해 특정 학생들을 위한 강좌를 여는 것은 타 학생들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 데다 그동안 교육청이 ‘금기’처럼 여겨온 입시위주 교육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1일부터 25일까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주 상일 여고에서 서울대 정시 대비 논술 교

실을 운영한다. 운영예산으로 강사료, 교재제작비 등 총 900여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수강 대상은 광주지역 고교에서 추천한 3학년 수험생 29명으로 서울대 정시모집에 응해 논술시험을 치를 수험생들이다.

강사는 논술 지도경험이 풍부한 광주지역 교사들로, 학생들을 3개반으로 나눠 수업한다. 수업은 매일 오후 5시부터 4시간씩 모두 60시간 실시된다.

시 교육청은 사고력 신장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향

상,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논술교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교육계에서는 “교육정책의 성과를 수도권 대학 진학 위주로 가능하는 현실을 의식한 결과물이 ‘서울대 논술반’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시교육청이 우수학생 중심의 심화반 편성을 금지하고, 자사고·자공고 후 5시부터 4시간씩 모두 60시간 실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올 상반기 고 2,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논술교실의 경우 대입 정시전형에 앞서 수시에서 논술을 치르는 대학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정시에서 유일하게 논술고사를 보는 서울대 대비 과정은 빠져 있었다”며 “이런 사정 때문에 별도로 서울대 정시 대비 논술교실을 운영키로 한 것일 뿐 특정 학생들을 배려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진학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학교에 거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이 특정 학생들을 위한 논술특강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 한 고교의 교장은 “그동안 보편·평등 교육을 고수해온 시교육청이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배려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고교생을 둔 학부모는 “올해 수능이 지난해에 비해 쉽게 출제돼 논술의 비중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교육청이 논술교실을 연 것은 긍정적”이라며 “시교육청이 공교육 예산을 특정 학생들을 위해 쓰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올 상반기 고 2,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논술교실의 경우 대입 정시전형에 앞서 수시에서 논술을 치르는 대학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정시에서 유일하게 논술고사를 보는 서울대 대비 과정은 빠져 있었다”며 “이런 사정 때문에 별도로 서울대 정시 대비 논술교실을 운영키로 한 것일 뿐 특정 학생들을 배려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연평도 포격 1년...당시 K-9자주포 사수 정병문씨



지난해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해병대 연평부대 포7중대 선임병으로 K-9자주포 사수였던 정병문씨가 북한 포격에 희생된 친구 故 서정우 하사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피범벅 포반장 얼굴 어른거려 먼저간 전우 뭇까지 살아야죠”

“피 흘리는 전우의 얼굴만 보일 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다. 그저 북한에 포를 쏘아야 한다는 생각에 포탄을 집을 생각만 했지요.”

정병문(23·광주시 남구 봉선동) 씨는 1년 전인 지난해 11월 23일 오후(2시30분경)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당시 전역 2주를 남겨뒀던 정씨는 해병대 연평부대 포7중대 제3포반 최고참으로 사실상 마지막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중대 포격 훈련 이후, 다른 중대의 훈련이 시작되자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타 중대 포격이 시작되자 대북 경계 상태를 유지하며 대기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달랐어요. 우리 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포 소리가 너무 큰데다 터지는 소리가 들려 불발탄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포탄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직감적으로 북한 도발을 예

감했다고 한다.

귀를 때리는 폭발음에 귀가 멍해지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머리 속도 하얗게 비어 버렸다. 짧은 시간이지만 얼핏 이렇게 죽는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동시에 이마에서 피를 흘리는 포반장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이 때 어디선가 포격명령을 들었고, 155mm K-9자주포 사수였던 그는 본능적으로 부사수와 장전수 등 부하들에게 “포탄 집어”라고 외치며 응사에 나섰다. 피 흘리는 전우 얼굴과 응전해야 한다는 분노만이 온 몸을 지배했다.

다행히 그의 중대원들은 가벼운 부상자만 있을 뿐 중상자나 사망자가 없어 안도했다.

하지만 상황이 정리된 후, 같은 광주출신으로 친구인 故(故) 서정우 하사가 숨졌다는 소식이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연평도 해병대에는 고향이나 학교가

같은 이들이 드물어 서 하사와는 각별한 사이였다.

그는 사고가 있기 바로 전날, 의무실에서 서 하사를 만나 잠깐 얘기를 나눈 것이 마지막이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포격 당시를 회상하면서도 답답했던 그는 서 하사 얘기를 할 때면 울음을 참느라 힘겨워했다.

올해 조선대 제이체측공학과에 복학한 그는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취중에도 연평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 다만 먼저 간 친구, 전우의 뭇까지 충실히 살아야 한다는 사망감을 전역 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그에게는 하나의 바람이 생겼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전방에서 늘 발생하는 전시상황에 목숨을 거는 군인들의 희생 대가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군에 대해 애정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다. /최희종기자 chae@

남구 의료폐기물 시설 공사 중단

남구청 건축허가 취소 통보...업체측 손배소 추진

광주시 남구는 21일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해당 업체 측에 건축허가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광주시로부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남구는 현장실사, 청문절차 등을

통해 건축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남구의 이번 결정으로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공사는 전면 중단된다.

업체 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구는 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허가 취소에 이어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강제 이행금 등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과 연결된 목재폐기물 처리시설,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과정에 대한 적법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우암학원 창학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대학원 (062) 605-1114 (062) 605-1115

‘문화나눔 상상강좌’ 제10탄 ‘대중음악에서 광주의 미래를 찾다’

“80년 5월항쟁은 광주만의 불멸의 음악 자산 이젠 아시아의 음악산업 중심으로 성장해야”



- 김중를 ‘임을 위한 행진곡’ 작곡자 JR미디어 대표
- 24일(목요일) 오후 4시 빛고을시민문화관
- 문의: 062-670-7423, 062-220-0651

光州日報社·광주문화재단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약속합니다!

저기도! 저기도!

시·군·구 통합!!!

지역의 건의를 받습니다!

시·군·구를 통합하면?

- ▶ 주민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복지혜택은 늘어납니다.
- ▶ 각종 편의시설의 공동이용, 교통과 학군조정 등으로 주민생활이 편리해 집니다.
- ▶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지역경쟁력이 제고됩니다.
- ▶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시·군·구 통합절차

```

통합기준 → 통합 건의 → 통합방안 마련 → 통합 권고
(개편위원회) (대통령·국회제출(12.01) (광주광역시-지방자치단체장))
↓
주민투표 → 지방의회 의결 →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운영 → 법률 제정 → 통합지방자치단체 출범
(2014.5.7)

```

시·군·구 통합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건의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 통합건의

누가? 주민(주민투표권자 1/50 이상의 연서),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

언제? 2011. 12. 31까지(이후에도 가능)

어떻게? 통합건의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를 경유

어디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홈페이지(www.clar.go.kr)참조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Tel / 02)2180-2922~3